

CERIK ESG Insight

Vol. 1

2023

1.26

이슈 1

건설산업의 ESG 필요성과 과제

이슈 2

최근 건설산업 ESG 동향과 2023년 전망

이슈 3

건설기업의 ESG 대응 동향 및 중점 추진 방향

ESG 소식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SG 경영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의 길 모색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사회,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서 기업, 산업 및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ESG에 관한 관심 증가는 그동안 파편적이고 지엽적으로 논의되었던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공유 그리고 윤리·투명성 등의 이슈들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면서도 종합적인 활동 및 보고기준으로 제시되고, 산업과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국가는 200여 개에 이르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도 120여 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회계기준(IFRS)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EU'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주요기관들이 ESG 공시기준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채권시장도 2021년까지 6년간 약 20배 성장하여 1,000조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 12월, K-ESG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과제에 포함되었던 ESG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주요 업종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세도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ESG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입니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7%, 에너지 소비량의 약 36%가 건축물 및 건설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거시설 등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이에 기반이 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ESG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의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에서도 ESG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건설기업은 물론, 우리 건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ESG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과 기업, 그리고 개인 차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0월 '건설업 ESG 경영연구팀'을 신설하고, 건설산업 내 ESG 인식 확산 및 대응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와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그 일환으로서, ESG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충재

이슈 1

건설산업의 ESG 필요성과 과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ESG 이슈 지속 확대

- ◎ ESG는 Environmental(환경)의 'E', Social(사회)의 'S' 그리고 Governance(지배구조)의 'G'의 약자로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경영 및 산업 차원의 패러다임이자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며, 구체적인 실천 및 활동임.
 - 기업 차원에서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응하는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서, ESG는 이를 실행하는 기업 전략 이행의 제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됨.
- ◎ 2004년 '국제연합 글로벌 콤팩트(UNGC)'의 공개보고서를 통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처음 언급된 이래로 각종 ESG 이슈에 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됨.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확산됨에 따라 그 해결 방안으로 ESG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됨.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목받은 기후변화,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의 이슈는 사회 전반에 ESG 관심이 증대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음.
- ◎ ESG 이슈의 확대로 인해 그동안 파편적이고 지엽적으로 논의되었던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그리고 윤리·투명성 등의 이슈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종합적인 활동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산업,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서 확장됨.
 - 최근 ESG 이슈의 확산은 산업, 기업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동시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 향후 ESG는 우리 사회와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 계기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이슈화될 것임.



기업과 산업, 나아가 사회에서 ESG는 선택 아닌 필수

- ◎ 소비자 등 기업을 향한 국민의 요구가 과거 재무적인 성과에 국한되었다면, 이제 환경, 사회 등 다양한 비재무적인 요인들이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고 있음.
 - ESG의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등 각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각각의 요소는 기업과 국가 등의 투자 의사결정 및 장기적인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비재무적 요인임. 최근 비재무적 요소들에 관한 관심 증가와 국내외적인 논의 확대는 기업과 산업에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음.
- ◎ 환경(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부 정책과 국제적인 기후변화 등), 사회(공급망 관리, 인권 등), 그리고 지배구조(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기업윤리)의 논의 진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기업의 공시 의무 등 정보공개가 강화되어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에 ESG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음.

- 국제적인 자금 이동의 주요 기준으로 ESG가 부상함에 따라 ESG 정보공개 관련 규제도 속속 도입되고 있음. 당장 상장기업들의 경우 ESG 정보공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ESG 정보공개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ESG 보고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 ◎ 향후 ESG의 지속 확산이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자금조달 등 금융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투자자 등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ESG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임.
 -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에 ESG 경영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등 금융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ESG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실제로 매년 기업들의 ESG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글로벌 책임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 기업의 가치 및 경영성과 평가에서 ESG 성과를 중요하게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ESG는 신용평가 등 기업 평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등장하게 되었음.
 -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ESG 경영을 반영하였거나 반영할 예정임. ESG 경영 구축에 소홀할 경우 신용평가 등 기업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관련 금융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ESG의 중요성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속 확대 전망

- ◎ ESG를 구성하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요소는 건설시장은 물론, 건설생산 활동을 비롯한 건설산업 전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ESG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타 산업과 비교해 건설산업에서의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 먼저 건설시장 측면에서는 환경, 사회 등 각 분야의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기존 시설물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각종 기준 상향 등이 예상됨.
 -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방재,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수요 증대 등이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적극적인 환경저해 요소에 대한 기능적 대응과 원천적인 시설물의 친환경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환경과 에너지를 감안한 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규제가 늘어날 전망이다.
 - ‘사회’ 요소 측면에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지속 확대됨. ‘사회’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 ‘공유가치 창출’ 등의 개념적 확산은 산업, 주거, 교통 및 문화 등 다양한 시설물 수요에 변화를 줄 것임.
- ◎ ESG는 건설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규제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큼. 특히, 건축물, 건설 시공과정의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사회 분야에선 산업안전, 건설 생산 참여자들의 인권문제, 협력업체 관리 등 공급망 관리 등에 대한 이슈도 커질 전망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업들은 그동안 환경, 사회 등 ESG 분야 대해 그동안 관심이 낮았고,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ESG 이슈의 부상은 건설 생산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특히,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 투자시장에서 ESG 요소의 고려는 건설사업 및 건설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재·장비 등의 생산 요소의 직접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자재·장비의 조달 관련 이슈를 증대시키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ESG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설계, 공법 등을 활용하는 이슈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검토단계에서의 다양한 사업추진 요소와 함께 사업 주체는 물론, 사업 참여자들의 ESG 경영추진 여부 등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전망되며, 이는 투자 유치의 중요한 선제요건이 될 것임.
 - 자재 및 설비, 장비 등의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요소를 고려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기업에게는 친환경 자재, 기계 및 장비 등의 원활한 수급과 ESG의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공법의 개발 및 활용 등의 이슈가 빠르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ESG 확산에 따른 건설산업 차원의 전략적 대응 필요

- ◎ 최근 국내외 ESG 관련 이슈 논의와 정부 등 국가들의 제도화 움직임을 감안할 때, ESG의 확산은 단기적인 이슈나 새로운 경영이론이 아닌, 향후 지속 확대될 국가와 산업, 기업 차원의 현안이라 할 수 있음.
 -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본격적 이행과, 인권 강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대응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산업, 그리고 기업에 영향을 미칠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공시 초안 발표 등 주요 ESG 공시기준이 공개되었으며, 주요국들은 ESG 관련 정보공시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건설산업도 ESG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 그리고 기업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정부는 ESG와 관련하여 빠르게 바뀌고 있는 국내외의 논의와 제도화 동향에 발맞추어 건설산업의 정책·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ESG를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실행전략 수립 및 시행을 주도해야 함. 동시에 상대적으로 ESG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 가이드라인과 평가 기준으로서의 건설업 ESG 성과지표를 빠르게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임.
 - 산업 차원에서는 먼저 건설산업 내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 추진이 필요함. 건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및 건설안전 강화, 산업 내 참여자 간 협력 확대 등 ESG가 실질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의 방향과 추진모델, 그리고 성공사례의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건설기업은 ESG 경영이 기업 내부에 내재화되어 실질적인 경영 관행의 개선과 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ESG의 각 분야별로 논의되는 핵심적인 이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 ESG 경영은 우리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생산성 향상, 상생협력 강화 등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와 건설기업, 더 나아가 건설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건설업 ESG 경영 연구팀」

이슈 2

최근 건설산업 ESG 동향과 2023년 전망



에너지 위기, EU 택소노미 채택 등 ESG 이슈 지속 확대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 등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가동을 중단하면서 가스 공급 제한이라는 조치를 단행한 상황으로 기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 대책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음.
 - 에너지 위기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에너지 요금을 중심으로 한 유럽 물가 급등이 있음. 영국 중앙은행이 2022년 10월 밝힌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유럽 곳곳에서는 고물가와 사회 불안정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 2022년 7월, 유럽연합(이하 EU) 의회는 원자력, 천연가스를 친환경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택소노미(taxonomy :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채택하였고,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본격적인 투자를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였음.
 - EU 택소노미는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목록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투자(녹색 금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택소노미가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강제로 제한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여기에 속하는 경제활동은 정책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큼.
 - IRA의 골자는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만 3,690억 달러를 배정함.



해외 주요국, ESG 정보공시 제도화 급속히 진행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에 있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2022년 3월,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의견수렴 과정 중으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음.
 - IFRS 공시기준은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에 중점을 두어 공시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공시를 내용으로 함.
 - IFRS 재무보고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는 ISSB가 추진 중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채택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어서 미리 공시를 위한 데이터 확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 2022년 11월,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이 독자적으로 만든 ESG 정보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ESRS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 발표되었음.
 - ESRS는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영향과 기회 및 위험에 대해 보고하는 규칙과 요건을 담고 있음.
 - 환경기준인 ESRS E1(기후변화), ESRS E2(오염), ESRS E3(수자원), ESRS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등 다섯 가지와, 사회기준 ESRS S1(자체인력), ESRS S2(가치사슬의 직원들), ESRS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ESRS S4(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등 네 가지, 지배구조는 당초 ESRS G1(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가 삭제되고, ESRS G2(비즈니스 수행)만 남게 되었음.
-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22년 3월,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 공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기후 관련 공시 내용으로는 ① 이사회 및 경영진의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 및 거버넌스 정보, ② 기후변화가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③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④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등임.
 - 또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①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조건, 전환 활동이 재무제표 관련 항목에 미치는 영향, ②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조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지출 및 전환 활동 관련 지출, ③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조건, 전환 활동이 각 재무제표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 ④ 재무제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등을 공시토록 함.
 - 이에 따라 이미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에서 자금조달 및 상장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기후 공시 의무화에 관한 대비가 필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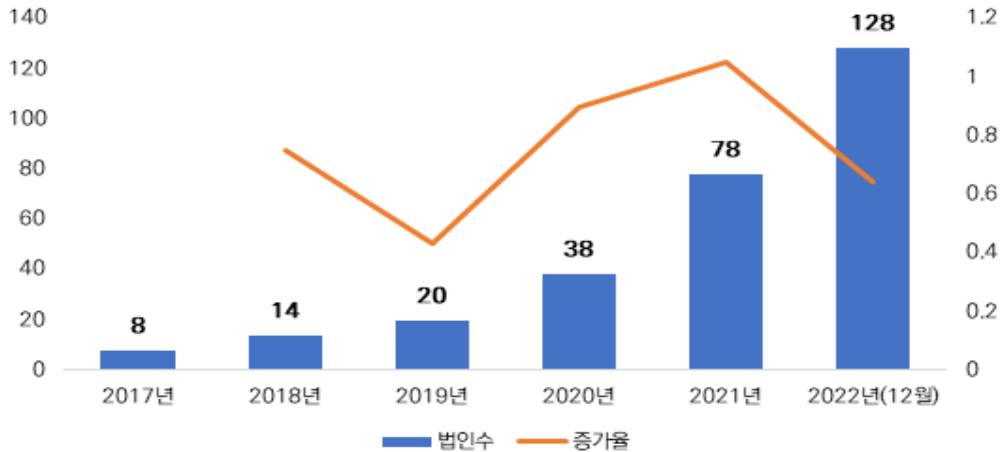


국내, ESG 정보공시 관심 증대 및 ESG 금융 지속 성장

- ◎ 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한 기회·위험요인 등을 공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법인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한 기업이 2021년 78개 사에서 2022년 128개 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시 기업 현황을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법인이 113개 사로 88%에 이르고 있고,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72%가 공시했으나, 시가총액 1조 원 미만 기업은 6% 만이 공시한 상황임. 이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기에 기업이 사전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자율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 ◎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는 2021년 이후 폭등하여 2022년 상반기 현재 전체 상장기업 792개 사 중 188개 사(23.7%)가 설치한 상황이며, 2022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41개가 신설됨.
 -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주로 2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6월 현재 존재하는 189개의 ESG 위원회 중 2021년 이후 신설 또는 확대·개편된 위원회가 175개이고, 2022년 한 해에만 신설된 ESG 위원회가 41개에 달하는 상황임.
 - 현재 이사회 내 ESG 위원회는 운영 초기 단계로서 ESG 경영을 활발하게 실행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 것으로 보임
 - ESG 위원회의 주요 안건 내용을 각각 ESG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ESG 공통 안건이 48.74%로 절반에 가깝고, 지배구조 관련 안건이 21.83%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지배구조 안건 330건 중 내부거래 관련이 205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안건 대비 비중 역시 13.56%로 높음. 내부거래 안건은 이사회 결의가 의무화된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등이 다수 차지함
- ◎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래, 정보공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구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임. 2023년부터 ESG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이전까지는 자율공시이지만,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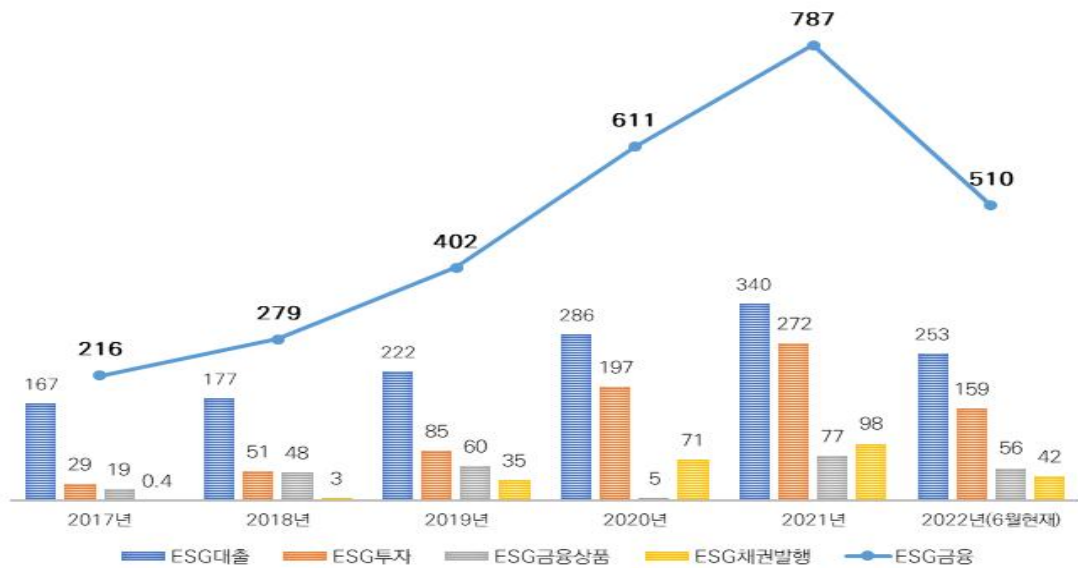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 한국거래소도 2017년 3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 2024년에는 5,000억 원 이상, 2026년에는 전 코스피 시장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 2023년 1월부터 가동되는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됨.

◎ 2021년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787조 원으로 최근 5년간 39% 증가한 상황임. 2022년의 경우, 6월 현재 510조 원으로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을 지속 중임.

- 2021년 기준 787조 원에 달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전년과 비교하면 29% 성장한 결과임. 유형별로는 대출 340조 원, 투자 272조 원, 금융상품 77조 원, 채권발행 98조 원임. 모든 ESG 금융 유형은 2020년 대비 최소 15% 성장(대출 19%, 투자 38%, 금융상품 37%, 채권발행 38%)하였음.
- 이 중 공적금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연금의 규모가 전체의 68%를 차지함. 민간금융은 은행섹터가 전체의 70%를 차지함.
- 전체 ESG 금융에서 공적금융은 전년 대비 16% 성장한 반면, 민간금융은 42% 성장하였음.

〈그림 2〉 ESG 금융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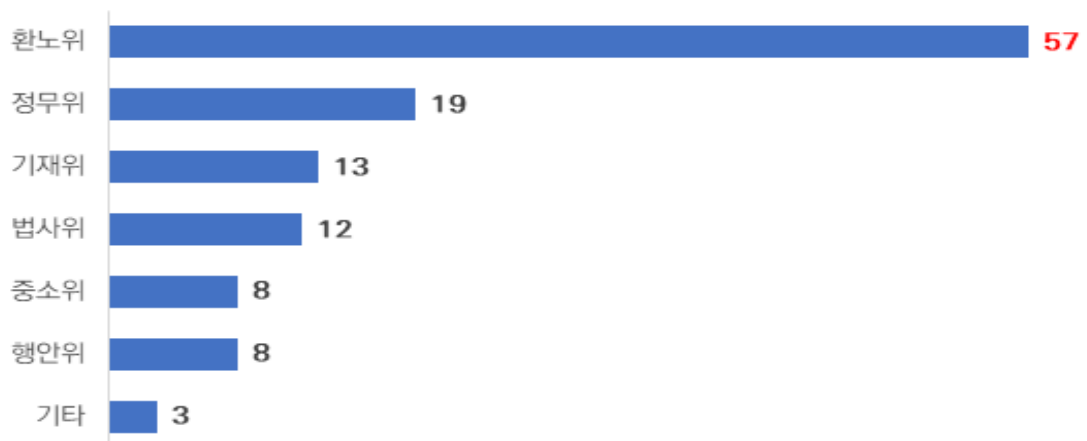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국회의원 이용우(2022). “2022 한국 ESG 금융백서”.



2023년, 환경·사회 분야 본격 성장 및 업종별 ESG 이슈 부상

- ◎ 2023년에는 지금까지 ESG 분야 중 가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이슈가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며, 더불어 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가 크게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말 기준으로 국회 출범 이후 국회 소관위별로 ESG 관련 법안의 발의 건수를 보면, 전체의 50% 가까이가 환경, 노동 관련 이슈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임.

〈그림 3〉 국회 위원회의 ESG 관련 법안 발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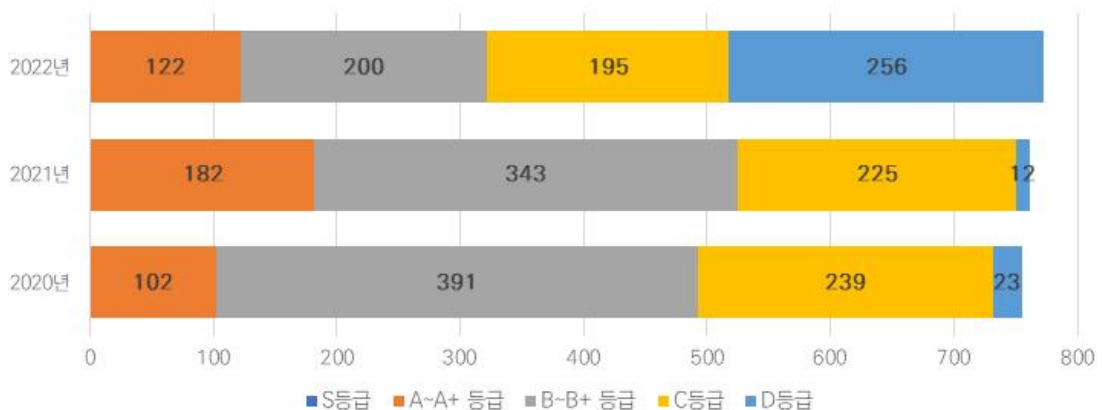


자료 : 2022 글로벌 ESG 포럼(2022.8), “ESG 상생 성공사례”, 대한상공회의소.

-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완료되었고, 2023년 이후부터 ‘사전 영향 평가 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들이 실시될 예정임.
- 이와 함께 최근 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인권 대응, 산업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23년에는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본격 시행되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또한,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내에서도 「인권정책기본법」이 나왔고, 한국 버전의 「K-공급망실사법」도 초안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어, 사회 분야에 대한 ESG 기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 ◎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2년도 ESG 등급을 보면, 2021년 대비 등급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가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엄격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 지배구조 분야 평가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ESG 정보공시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2023년 ESG 평가 및 등급 산정 관련 이슈의 급성장이 예상됨.
 - KCGS의 773개 사에 대한 2022년 ESG 등급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A~B등급의 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반면, D등급 업체는 12개 사에서 256개 사로 대폭 증가함.
 -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정된 모범규준을 평가모형에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평가기준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잘 보여줌.
 -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 부문에서의 평가는 변화의 폭이 작았으나, 지배구조, 사회 등의 부문들의 평가가 크게 떨어져 전체등급을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이는 그동안 환경 이슈가 크게 부상하였다면, 현재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로 확장되고 있는 양상이고,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림 4〉 KCGS의 ESG 등급별 현황



자료 : ESG 포럼, KCGS.

- ◎ 주요국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ESG 관련 정보공시 특히,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의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는 ESG 경영 확산과 산업 차원의 준비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ESG 및 기후변화 관련 사항]

1. 민간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 ESG 경영 :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및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

-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 국제표준·국내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 정비
 - KSSB(회계기준원내 산하기구) 설립 등을 통해 ESG 공시기준 및 검증 관련 국제기준 논의대응·규율체계 마련 등 추진 →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령 개편방안 검토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 구체화, 컨설팅, 우수기업 지원 등 추진
- ESG 투자 : 녹색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22.12.)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 * 사회적프로젝트 범위·사례·예시, 워싱 방지 등을 위한 사전·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
-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 기여도를 반영하는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 인프라 구축 :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인력 양성
 -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 감안해 장기 학위 과정 개설 검토
- 추진체계 : 민관합동 컨트론타워인 ESG 협의회(기재부 차관 주재) 구축

2.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 기본계획 :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23.3.) 및 10대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CCUS, 수소, 국외감축 등 10개 부문
- 배출권거래제 : 배출권 조정방향·할당방식 등 포함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조기 수립* 추진('23.下)
 - 법상 수립기한('24년 말) 대비 1년 앞당겨 추진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배출권 제3자 시장참여 단계적 확대, 거래형태·상품 다각화* 추진
 - *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검토
- 핵심기술 :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전원 등 산업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감축 기술 R&D 지원
 -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23~'30년간 9,352억 원), CCUS 기술 상용화('23년 942억 원) 등
- 산업단지 : 산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 추진
 - * 친환경 에너지 보급,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산단 구축(~'27년 15개)
- 신무역장벽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26.) 전까지 EU 협의 강화 및 철강 등 업계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 마련('22.12.)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EU내 수입업자에게 수입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부담 부과 제도
 - 탄소 배출 측정 및 검증 기반 강화, 배출량 산정 DB 구축, 탈탄소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장단기 대응전략 마련

- 2023년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에게 적용하게 될 공시지침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ESG 정보공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 ESG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진전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ESG가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 기준들이 각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이슈 및 주제로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 글로벌 ESG 기준이 지속 상향되고, 스코프(Scope) 3¹⁾와 LCA(전과정)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ESG 등급이 크게 하향될 가능성이 큼. 2023년에는 ESG 경영에 소극적이거나 리스크에 단순 대응하는 기업들과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화 등 환경, 사회 부문 규제의 본격화와 ESG의 확산에 따라 업종별로 관련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대응 활동의 방향 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의 추진 유도 및 산업 단위의 적극적인 ESG 대응을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의 마련에 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2023년, 건설산업 내 ESG 대응 이슈 본격 성장 전망

- ◎ ESG 관련 이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금융, 제조업 등에 비해 ESG에 관한 관심이 적었던 건설산업에 있어 2023년부터는 ESG가 본격적인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 국내외의 ESG 정보공시 제도화 움직임과 환경규제의 강화, 인권 및 가치 경영,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사회적 책임 등 사회 이슈의 부상,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충실도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각종 ESG 관련 이슈의 부상에 있어 건설업도 예외는 아닌 상황으로 건설산업과 관련된 환경, 사회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 2023년 건설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칠 분야는 환경으로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환경 관련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9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는바, 건설 분야의 영향도 불가피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건설산업과 관련된 산업, 건물, 그리고 폐기물 분야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

1) 스코프 3(기타 간접배출)은 스코프 2의 간접 배출원을 제외한 그 밖의 간접 배출원으로, 사업장 경계(조직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함. 종업원 출퇴근 및 출장, 프랜차이즈, 구매된 원재료 또는 1차 재료 생산 등과 같은 경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스코프 3에 해당함.

현을 위한 규제의 강화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의 영향이 전망됨.

- 산업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산업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강화에 따라 원가 상승이나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건물의 온실가스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영향은 국내 건설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중동국가의 탄소중립정책 강화 움직임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에서의 계약 및 시공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2021년 12월 발표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할 전망이고, 이에 따른 건설산업 내 다양한 환경 리스크가 부각될 것임.
-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2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개발,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 10대 분야의 기후변화영향평가²⁾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건설 전반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부의 사회 분야 관련 제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설산업에서 사회 분야의 여러 이슈가 건설 영업, 생산 등 전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인권,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등 주요한 ESG의 사회 분야 이슈들이 2023년 ESG의 핵심 키워드로서 부상할 전망이다.
- 해외 각국의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 및 의무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의식이 강한 건설현장에서의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등과 같은 이슈는 더욱 크게 부상할 것임.
- 산업안전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안전 문제는 ESG 이슈의 증대와 함께 더욱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산업안전 이슈의 지속적인 확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쳐 건설기업, 발주자, 협력업체 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임.
- 최근 ESG의 여러 이슈 중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공급망 관리임.
- 건설산업에선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산에 참여하는 원도급업체는 물론, 협력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의 관리 책임과 역할, 성과에 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건설산업 내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문화 확산과 협력업체의 ESG 성과의 관리 등에 대한 이슈도 성장할 것임.

2)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됐으며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 평가대상은 △ 에너지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 도시 개발, △ 수자원 개발, △ 항만 건설, △ 산지 개발,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도로 건설, △ 공항 건설, △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10개 분야임.

〈그림 5〉 2023년 건설산업 ESG 관련 주요 이슈



김영덕(선임연구위원·ydkim@cerik.re.kr)

이슈 3

건설기업의 ESG 대응 동향 및 중점 추진 방향



대형건설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의 ESG 대응 활발

- ◎ ESG 중에서도 특히 환경 관련 이슈의 급부상에 따라 건설기업들은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대건설’, ‘DL 이앤씨’,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등 주요 건설기업들은 최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에 전략적 진출을 한 이래로 사업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소형모듈원전(SMR)³⁾을 차세대 원전사업의 핵심으로 예상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DL 이앤씨’는 탄소중립의 핵심인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등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임.
 - 환경 및 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 중인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분야 선도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폐기물 산업 고도화를 이끌고 있음. 폐기물 배출부터 수거·운반·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플랫폼 ‘웨이블’을 구축하였고, 그린수소(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나 전력, 희소금속 등을 생산하는 등 고부가 가치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 ‘포스코건설’은 수소 인프라,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자원순환(소각로, 수처리)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 ◎ 또한, 건설기업 다수가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의 ESG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평가와 거리가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ESG 경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국내의 KCGS로부터 2019년 이후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고 있으며, 해외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평가에서도 BBB등급을 획득함. 또한, 4년 연속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리더십그룹’에 연속으로 편입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음.
 - ‘GS건설’은 친환경사업에 전략적 진출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ESG 경영을 추진 중이며,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동참,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 및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 등 ESG 경영의 내재화에 노력 중임.
 - 또한, 건설업계 최초로 ‘ESG 안전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찍부터 ESG 경영을 추진해 온 ‘롯데건설’은 ESG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중장기 ESG 추진 전략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환경 분석을 비롯해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운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추진, 대외 공시 및 평가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포스코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업에 특화된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3) 소형모듈원전은 기존의 대형원전(1,000~1만 5,000MW급)의 3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의 출력을 가진 소형원전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ESG 경영 지원과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으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 섬유로 만든 근무복 제작 등으로 자원순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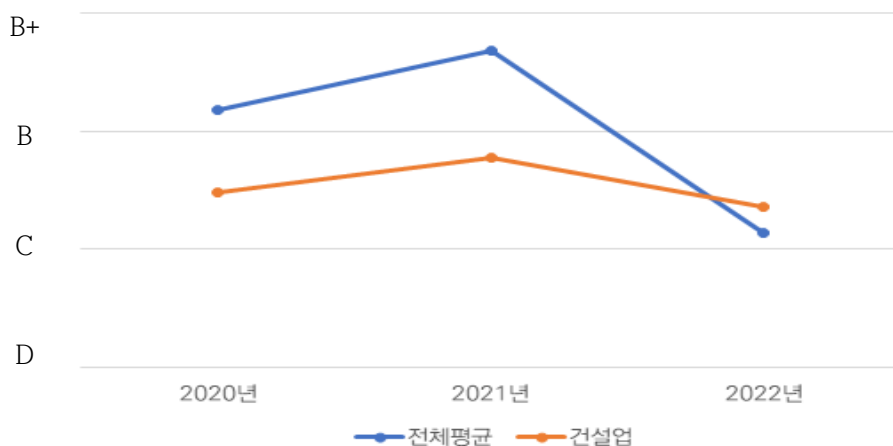
- ◎ 대형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건설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는 등 건설업계의 지속가능경영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임.
 - 대형 상장 건설사의 경우 보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ESG 경영이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ESG 경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대형건설기업을 넘어 이제는 중견건설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GS건설과 대우건설, DL 이앤씨 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중견건설기업에선 아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와 ESG 경영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지만, 중견건설기업인 ‘반도건설’과 ‘아이에스동서’ 등이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임.



건설기업, “ESG 경영의 적극적 추진에 애로사항 많아”

- ◎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기업들이 ESG 확산 초기부터 ESG 경영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경영 내실화 및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성과는 미흡한 상황임.
- ◎ 실제로 2022년 말 발표된 ESG 포털에 공개된 23개 상장 건설기업의 ESG 등급을 보면, 2022년 평가 등급은 전체등급 평균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서비스업, 금융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특히, 환경 부문이 타(他) 부문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ESG 경영의 내실화에 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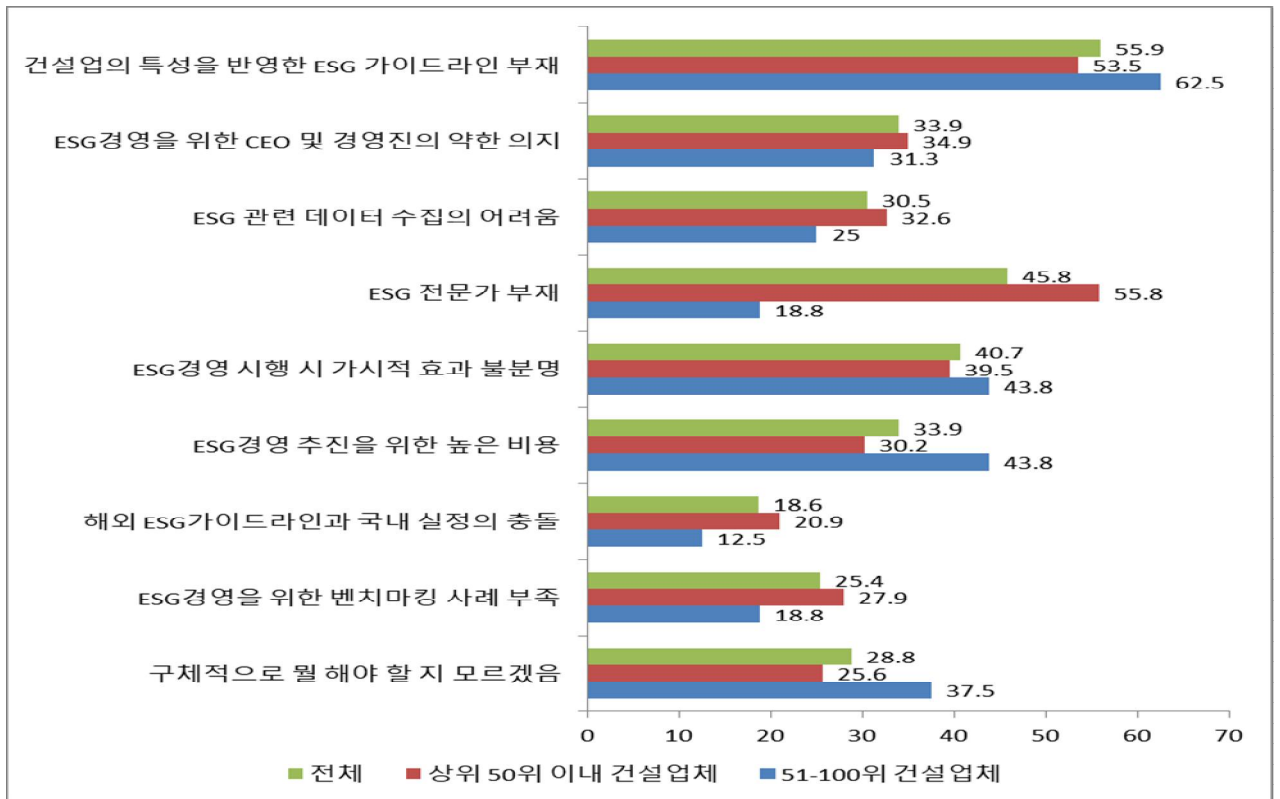
〈그림 1〉 ESG 등급 전산업 평균 대비 건설업 비교



자료 : 각 연도 KCGS ESG 평가 등급.

- 특히, 2022년 건설기업 ESG 등급을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위 이내 기업들의 평균 등급은 A~B+ 구간(3.67, 등급 구간을 5점 척도로 환산 시), 11~50위 기업들은 B+~B 구간(3.18), 50위권 밖의 기업들은 C~D 구간(2.36)으로 건설기업 규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중견, 중소건설기업의 ESG 확산에 따른 기업 차원의 대응 수준은 대형 건설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2022년, 100위 이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우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 특히, 중소건설기업의 경우,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고 답하였으나 건설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ESG 경영을 위한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 실제로 ESG 경영 추진 시 건설업체가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51~100위 업체의 37.5%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함(그림 2) 참조).
 - 또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부재'가 ESG 경영 추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 건설기업에 적용가능한 ESG 경영 가이드라인이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2〉 ESG 경영 추진시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최은정(2022), “건설업 ESG 경영 실태와 대응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와 함께 전문가의 부재, ESG 경영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ESG 경영의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ESG 경영에 대한 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51~100위 업체들의 50%가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50위 이내 업체의 14.0% 응답률을 고려하면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ESG 경영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산업 차원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민관 협력 필요

- ◎ 최근 국내외 ESG 확산 추세 및 향후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건설산업 차원의 ESG 확산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활동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원(2022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지표를 토대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수준 평가를 실시함. 그 결과, 상대적으로 건설업에서 취약하게 지적된 분야는 <표 1>과 같음.

<표 1> 갭(GA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취약 ESG 지표

현재 건설업에서 중요하지만 취약한 ESG 지표		현재 건설업에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취약한 ESG 지표	
환경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원부자재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사회	조직 내 사회 분야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공시	사회	자발적 이직률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		교육훈련비
	정규직 비율		복리후생비
	종업원 안전/보건 추진체계 구축		인권 정책 수립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경영
	전략적 사회공헌		협력사 ESG 지원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고용 평등 및 다양성		
	노동 관행		
지배구조	윤리경영 및 위반 사항 공시	지배구조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감사기구 전문성		이사회 성별 다양성
	중대사고 위험관리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주 : 취약한 ESG 지표는 건설업체 전체 취약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자료 : 최은정(2022), "건설업 ESG 경영 실태와 대응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산업 차원에서 ESG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경영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건설산업 ESG 경영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선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산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는 ESG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 또한, 정부와 건설기업이 건설산업 내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ESG 경영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업은 ESG의 영역 중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파악한 후 해당 분야의 구성 요인 중 가장 취약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선정해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 및 데이터를 축적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ESG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또한, 건설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설전문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고려해야 함.
- ◎ 건설산업 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즉,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건설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됨.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 건설산업 ESG 경영 유도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ESG 경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마련을 계획 중임.⁴⁾
 - 또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ESG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즉, ESG의 반영이 국제적 흐름이나, 공공조달은 환경·사회 요소의 일부만 고려하여 체계적 반영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조달기업인 특성을 감안하여 ESG 기반조성, 시범 적용(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등 검토)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⁵⁾
 -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 경제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 종합해 보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개별 건설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산업 차원에서 ESG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ESG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작업, ESG 분야별 모범 사례(best practice) 발굴, 교육 지원 등 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함.

최은정 연구위원(kciel21@cerik.re.kr)

4) 국토교통부(2022.11.),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 참조.

5) 관계부처합동(2022.12.), “비상경제장관회의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 참조.

ESG 소식

정부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2023.1.1. 시행
산자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투자공사(KIC) UN 책임투자원칙(UN PRI) 가입
2022년 탄소배출량 1% 이상 증가, 사상 최고치 기록 전망
대기업 87%가 협력사 ESG 평가, 매년 증가 추세

정부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 ◎ 2022년 12월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과제에 포함되었던 ESG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 병행
 - ②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 제공
 - ③ **(ESG 투자활성화)**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마련
 - ④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 ⑤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 유도
 - ⑥ **(추진체계)**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 설치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국이 모여 기후 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열리고 있음.
- ◎ 2022년은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022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열렸음.
- ◎ COP27의 가장 큰 성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이 타결되었다는 점임.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보상을 촉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재정적 부담 발생을 우려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기금 마련이 합의됨.
- ◎ 다만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및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다음 COP까지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COP27에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논의되었던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를 유지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논의가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 기조도 유지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11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이하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개최하고, 수소공급,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무탄소전력공급, 친환경자동차 등 총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심의·의결함.
-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국가가 당면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기술 획득이 성공할 경우에 후속 개발을 지원하여 현장까지 적용하는 각본(시나리오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이번에는 얼마 전 발표된 ‘수소 기술 미래 전략’(22.11.9., 수소경제위원회)과 연계하여 수소와 연관성이 높은 △ 수소 공급, △ 무탄소 전력공급, △ 친환경차 분야를 비롯하여,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 핵심수단이 되는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포함, 총 4개 분야에 대한 이행안을 수립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야	내용
수소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생산·공급 목표 '30년 연간 194만 톤, '50년 연간 2,790만 톤으로 확대 •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 단계적 확대('25년 1~2MW급 → '28년 10MW급 → '28년 이후 100MW급 이상) • '30년까지 수소 액화 기술 국산화('23년 0.5톤/일 → '30년 5톤/일 → '30년 이후 수십 톤/일), 암모니아-수소 추출설비,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 국산화 • 최근 4년간('20~'23년) 약 3,345억 원 규모 연구개발 예산 투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C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간 1,030만 톤, '50년 연간 최대 8,520만 톤 •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 단계적 확대('25년 연 7만 톤 → '30년 연 400만 톤 → '30년 이후 연 1,000만 톤),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 운영('30년 연 400만 톤 → '50년 연 1,500만 톤) 계획 • 탄소 전환·활용 기술 고도화('25년 연 7,000톤 → '30년 연 4만 톤) • 최근 4년간('20~'23년) 약 3,637억 원 규모 연구개발 예산 투자
무탄소 전력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 '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 •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 단계적 확대('27년 20% → '30년 50%)하도록 기술 고도화, 액화천연가스 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수소혼소, 수소전소)하는 기술 확보 • 수소연료전지 '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친환경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총 450만 대 보급 목표 • '30년까지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 완료, '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 병행 •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전력변환장치 등) '25년까지 국산화 계획 • 수소차 '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 확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2023.1.1. 시행

- ◎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taxonomy)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이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에 포함되었음.
- ◎ 다만, 환경부가 9월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일 경우로 제한함.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과 관련해선 초안과 비교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이 인정기준으로 추가됨.
- ◎ 또한, 개정 녹색분류체계에는 ‘태풍·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녹색부문 활동으로 새로 규정됐으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 대상 대출 등 금융서비스도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명시됨.
- ◎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품목과 이 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활동이 포괄적으로 녹색부문 활동에 포함됨. 6대 목표는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순환경제로 전환, △ 오염 방지·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등임.
- ◎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정부가 정리한 목록에 해당함. 친환경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산자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022년 12월 7일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하였음.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주요 진단항목 〉

정보공시(P)	환경(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정보공시 방식, 정보공시 주기, 정보공시 검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등
사회(S)	지배구조(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비율, 인권정책 수립, 근무시간 준수, 안전보건 인허가 취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 정보공개 투명성 등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 사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임.

한국투자공사(KIC) UN 책임투자원칙(UN PRI) 가입

- ◎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투자역량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책임투자원칙)에 국내 공적 투자자 중에서는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하였음.
- ◎ KIC는 “스튜어드십 원칙 제정, 투자자산 전반에 걸친 ESG 통합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모델 수립 등 책임투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면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 가입을 통해 글로벌 선도 책임투자기관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 PRI는 지난 2006년 UN 주도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로서 현재 5,000개 이상의 기관이 가입했으며, 가입기관 총 운용자산 규모가 약 121조 달러(약 17경 4,000조 원)에 이르고 있음.
- ◎ PRI는 ESG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투자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협력적 주주 참여 활동 기회, 책임투자 실무를 위한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음.

2022년 탄소배출량 1% 이상 증가, 사상 최고치 기록 전망

- ◎ 2022년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방출되는 탄소(CO₂)의 양이 전년보다 1% 증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세계탄소 프로젝트 연구팀’은 2022년 11월 11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런 내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구결과를 발표함.
- ◎ 2022년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연소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최대 배출국 중국과 유럽연합(EU)에서 각각 전년보다 0.9%와 0.8% 감소한 반면, 인도, 미국, 나머지 지역에서 각각 6%, 1.5%, 1.7% 늘어 전체적으로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음.
- ◎ 이 같은 결과는 탄소 배출 증가의 많은 부분이 자동차와 항공 여행 등 운송 부문에서 발생했고, 이는 세계 각국이 팬데믹 기간 내렸던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으로 진단함.
- ◎ 또한, 석유와 석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2021년보다 2%와 1% 증가하는 반면 천연가스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는 0.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음. 화석 연료 종류별로는 석탄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33%와 22%를 차지함.
- ◎ 2022년의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는 10~15년 전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파리기후협약이 정한 목표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진단하였음.

대기업 87%가 협력사 ESG 평가, 매년 증가 추세

- ◎ 2023.1.10, '중소기업중앙회'가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곳과 협력사 1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 ESG 관리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협력사 ESG 평가기준을 적용한 곳은 26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조사결과에 따르면, ESG 평가기준을 확대하는 대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2019년 17곳, △ 2020년 20곳, △ 2021년 26곳으로 늘어남. 세부 평가에서는 환경·안전·인권·보건·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고 있었으며,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곳은 14개사 (46.7%)에 이룸.
- ◎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선 70%가 구매정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유인책) 제공은 13곳, 페널티를 가하는 곳은 16곳으로 나타나,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많았음.
- ◎ 또한, 협력업체 108개사 중 58.3%가 '평가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은 '없다'는 의견이 42.6%를 차지해, 중소 협력업체의 ESG 역량에 대한 평가 치중 대비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 대기업의 지원 항목도 실질적인 협력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 설비, 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하였음. 대부분 교육(39.8%), 컨설팅(25.0%) 지원을 하고 있었음.
- ◎ 이와 함께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의 지원사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44.4%)', '실질적으로 도움 안 됨(27.8%)', '상환조건 등 지원요건 부담(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지원 필요 항목으로는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이 언급되었음.